2019. 2. 8. (금) 언론보도

MBN

2019년 02월 07일 (목)
종합

DMZ 도보여행길 등 접경지역 발전에 13조원 투자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진=행정안전부

군사 안보와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13조원 넘는 돈이 투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계획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4천억원, 지방비 2조2천억원, 민자 5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가장 많은 5조1천억원을 씁니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는 2024년까지 왕복 2차로로 건설됩니다.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과 연계해 철원에 '남북문화체험관'을 지어 남북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구도심 환경개선, 청년 창업·창작공간 지원 등 균형발전 기반 구축 관련 54개 사업을 위해 3조4천억원이 투자됩니다.

관광 활성화 사업비는 총 3조원 규모입니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도보 여행길,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 생태체험공간, 양구 펀치볼 관람 곤돌라와 전망대, 병영 체험공간 등입니다.

생활 SOC 확충에는 1조 7천억원을 씁니다. 권역별 거점 10곳에 다용도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LPG 저장시설·공급관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정부는 군부대 협의, 다른 계획과의 연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011년 처음 수립됐고 지난해까지 8년간 이 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 2조8천억원이 투자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朝鮮日報
2019년 02월 08일 (금)
사회 10면

DMZ 순례길 등 남북 접경지역에 13조2000억 투자

정부, 2030년까지 개발 계획

군사 안보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정체된 북한 접경지역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11년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일부를 수정해 7일 발표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총 165개 사업에 18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수정된 계획에선 예산 투입액이 5조8000억원 줄었다. 남북 관계 변동성 등을 고려해 대규모 민자 개발 사업 계획을 철회한 결과다. 반면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돼 추진 사업 수는 165건에서 225건으로 60건 늘었다.

가장 많은 돈이 투자되는 분야는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관련 분야다. 정부는 21개 사업에 5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가 오는 2024년까지 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과 연계해 철원에 '남북문화체험관'을 지어 남북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구도심 환경 개선, 청년 창업·정착공간 지원 등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경기 연천엔 내년까지 은퇴산업단지가 들어선다. 강원도 화천에선 재래시장 주변 활성화를 위해 상가밀집지역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된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도보 순례길,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 생태체험공간, 양구 펀치볼 관람 곤돌라와 전망대, 폐미사 등 군사시설을 활용한 병영 체험 공간 조성 등 관광 활성화 사업에도 3조원 정도가 들어간다. 또 정부는 권역별 거점 10곳에 다용도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짓고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LPG 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생활 SOC 확충 사업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김상엽 기자

경기일보
2019년 02월 08일 (금)
종합 01면

경기·인천 접경지역에 6조원 투자

(국비+지방비+민간투자)

정부, 발전종합계획 변경·확정

생활 SOC 확충·정주여건 개선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등 추진
2030년까지 균형발전 기반 구축

정부가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경기북부와 인천시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6조 원(국비+지방비+민간투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 기반 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경인지역 9개 사업(광역별도)에 3천649억 원(경기 2천559억 원·인천 1천90억 원) 등 전체 13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 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는 분단·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도보여행길을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2022년까지 286억 원을 들여 강화~고성까지 10개 시·군을 잇는 456㎞의 도보길(통일을 여는 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접경지역 대표 생태체험공간이 2022년까지 조성된다. 연천·포천·철원에 611억 원을 들여 119㎞ 길이의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균형발전 기반구축 전략으로는 먼저 중첩된 규제로 인해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인 연천 통현리 일대 은통산업단지(BIX)를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1천189억 원을 투입·조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또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일대 유휴 공간으로 청년 창업·창작공간인 청년 내일꿈 제작소(100억 원)를 2022년까지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파주시에 2022년까지 물국 청소년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데 238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양주·동두천시에는 상생플랫폼 구축과 근충테마파크 조성을 2022년과 2024년까지 각각 330억 원·360억 원을 투입, 지역 간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 거점에 민·군이 함께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강화~고성)가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1천억 원을 투입해 10개소가 확충된다. 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강화~옹진~김포~파주~고성) 저장시설 및 공급관이 오는 2030년까지 2천35억 원이 투입, 설치된다.

인천시에는 4천500억 원을 투입해 영종~옹진~강화를 잇는 서해 남북평화연도교(신도 평화도로)를 2024년까지 신설할 예정이다. 1단계는 영종~신도 3.5㎞(1천억 원), 2단계는 신도~강화간 11.1㎞(3천500억 원)를 조성해 열악한 도서·접경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남북 교류·협력을 대비한 교통망 확충에도 나선다. 또 강화군의 교동 동서평화도로를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관련기사 3면

한국경제
2019년 02월 08일 (금)
사회 29면

DMZ 관광활성화 등 접경지 개발에 13兆 투자

(2030년까지)

강화~고성 456㎞ 14박15일 도보여행길, 한탄강 주상절리 관광길 조성

접경지역 추진 주요 사업 (단위:억원) *사업비=국비+지방비+민자

사업명	기간	사업비
DMZ 통일을 여는 길	2019~2030년	286
농어촌 및 산간지역 도시가스 공급	2021~2030년	2035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체육시설	2019~2025년	1000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2017~2020년	611
DMZ 작물재배단지 조성	2020~2023년	288
고양~금란 국지도 확장	2020~2023년	400
접경벨트 평화산업단지	2020~2025년	700
근충테마파크 조성	2020~2024년	360

행안부, 접경지 발전계획 의결

폐교·마을회관에 여행 거점센터
양구 펀치볼 관람 곤돌라·전망대
농어촌·산간지역 LPG 저장고
연천 산업단지 2021년 완공

남북한 해빙기를 맞아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3조여원을 투자해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을 개발한다.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456㎞가 넘는 도보여행길부터 도로, 산업단지, 문화체육센터 등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에서 이 같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1년 행안부와 국토교통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등 11개 부처가 세운 장기계획을 이번에 처음으로 변경하면서 투자 규모를 늘렸다. 그동안 투입한 2조8000억여원을 합쳐 총 13조2000억원을 2030년까지 접경지역 사업 189곳에 투자한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 7조6000억원, 민간자본 유치 목표액 5조600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14박15일' DMZ 여행길 생긴다

강화에서 경기 파주, 강원 철원·양구 등을 지나 고성까지 10개 시·군에 걸쳐 'DMZ 평화를 여는 길' 456㎞를 조성한다. 행안부는 논밭 둑로 등을 활용해 456㎞ 가운데 단절된 36.9㎞ 구간을 연결하고, 지역 생태·문화와 분단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14박15일 일정의 노선을 만들 방침이다. 내년부터 4년간 286억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민간단체와 기업 등이 'DMZ대장정' 등과 같은 행사를 자체적으로 벌여왔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여행길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교, 마을회관 등을 재단장해 여행 거점센터 10곳을 설치하고 여기에 게스트하우스,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 등을 둘 계획이다. 행안부는 DMZ 여행길에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아 연간 2500억원가량의 경제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여행길 BI(브랜드 아이덴티티) 대국민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산업단지도 조성

연천·포천 등에 걸친 한탄강 주변엔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길을 조성한다. 양구의 독특한 지형인 '펀치볼'을 내려다보는 곤돌라와 전망대도 만든다.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제4땅굴에서 을지전망대 일대 1.2㎞ 구간이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과 산간지역 주민들을 위해 2035억원을 들여 마을마다 액화석유가스(LPG) 소형 저장고와 배관, 보일러, 계량기 등을 설치한다. 철원엔 500억원을 들여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과 연계한 '통일문화교류센터'를 짓는다.

인천 영종도와 옹진군, 강화군을 잇는 14.6㎞ 길이 연도교인 '서해 남북평화 도로'에 45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달 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이다. 최근 착공한 연천 은통일반산업단지도 2021년까지 조성을 마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 검토,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아시아투데이
2019년 02월 08일 (금)
종합 01면

펀치볼에 곤돌라… 접경지 13兆 투자

정부, 발전종합계획 변경

평화관광 등 225개 사업 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역점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경기·강원 북부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2030년까지 13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해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수립된 것이다.

지난 8년(2011~2018년) 동안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2조8000억원을 투자해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관계 개선·국가균형발전·지역일자리 및 활력제고 등 지난 8년 동안 변화된 국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한편 당초 계획된 사업 중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특히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밀착형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제고했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기반시설(SOC)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2000억원(국비 5조4000억원, 지방비 2조2000억원, 민간자본 5조6000억원)을 투입해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는 108개 사업에 3조원이 집행된다. 먼저 분단·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비무장지대) 인근에 도보여행길을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 코스로 개발한다. 지형·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양구 펀치볼 지역을 감상할 수 있는 하늘길(곤돌라)과 전망대도 조성된다.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전략으로는 42개 사업에 1조7000억원이 집행된다.

균형발전 기반구축 전략으로는 54개 사업에 3조4000억원이 집행된다.

먼저 중첩된 규제로 인해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전략으로는 21개 사업에 5조1000억원이 집행된다.

우선 영아한 도서·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남북 교류 협력에 대비한 교통망이 확충된다.

또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과 연계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범국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 거점이 조성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민자유치,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희 기자 kih@

서울신문
2019년 02월 08일 (금)
종합 05면

〈강화~고성 456㎞〉

DMZ 옆 둘레길·양구 펀치볼 곤돌라… 접경지 개발 '훈풍'

2030년까지 225개 사업 13조 투입

2035억 들여 LPG 저장소·공급관 설치
권역별 복합커뮤니티센터 10여곳 신설
국가균형발전 맞춰 지역 기반시설 확충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주요 내용

(자료: 행정안전부)

지자체	사업 내용	기간	사업비
강원	강화~고성 DMZ 인근 도보여행길(456km) 조성	2022년까지	286억원
강원 양구	펀치볼 하늘길(곤돌라) 조성	2024년까지	290억원
경기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119km)	2020년까지	611억원
강원	강화~고성 LPG 저장시설, 공급관 설치	2030년까지	2035억원
경기 연천	은통산업단지(BIX) 조성	2020년까지	1188억원

정부가 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도보여행 코스인 '동행을 여는 길'을 조성한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의 모습이 화채 그릇과 비슷해 '펀치볼'이라는 이름이 붙은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일대에는 곤돌라와 전망대를 설치해 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발표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등을 반영해 새로 짰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를 비롯한 11개 부처가 참여해 2030년까지 13조 2000억원을 들여 225개 사업을 추진한다.

DMZ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 범위에 설정돼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생태계의 보고'가 됐다. 정부는 인천 강화부터 강원 고성까지 DMZ 주변을 따라 걷는 456㎞ 길이의 도보여행길을 만들고 여행자들이 중간에 쉴 수 있도록 거점센터도 설치한다. 이 사업은 올해 시작해 2022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구의 펀치볼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고 생김새도 독특해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 정부는 여기에 곤돌라와 전망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쓸 수 있도록 공동 저장시설과 공급관을 설치한다. 2035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2030년 마무리된다. 군사시설이 많은 접경지역 특성을 살려 주민과 군이 문화·체육·복지시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복합 커뮤니티센터도 짓는다. 접경지역 일대에 총 10곳 정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 맞춰 지역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경기 연천군은 오랜 세월 군사 규제와 수도권 지역 규제에 묶여 발전이 지체돼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6년부터 '은통산업단지'를 짓고 있는데, 이를 내년 중 마무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강원 화천군 일대 상가밀집지역을 개선해 쇠락한 구도심·재래시장 활력을 높이는 사업도 진행된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도 조성된다. 영종도와 신도(인천 옹진)를 잇는 평화도로를 2024년까지 건설하고, 강원 철원군에 남북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통일문화 교류센터도 조성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새로 짠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군부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가 뚜렷한 사업들을 먼저 추진하되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사업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seoul.co.kr

세계일보

2019년 02월 08일 (금)
사회 08면

강화~고성, 'DMZ 통일을 여는 길' 조성

DMZ 접경지역 13조 투자 남북교류·관광 기반 조성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확정

2030년까지 국비·민자 등 투입
10개 거점에 LPG 공급관 설치
한탄강 주상절리 체험길도 조성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2022년까지 비무장지대(DMZ) 인근 456㎞(인천 강화~강원 고성)를 잇는 도보여행길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2030년까지 총 13조2000억원을 들여 인천과 경기, 강원 등 북한과 접경한 지역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국비 5조4000억원, 지방비 2조2000억원, 민간자본 5조6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변경된 종합계획안은 남북관계 개선과 새로운 지역 수요 등 국내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크게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 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에 따라 225개 사업이 추진된다.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전략에는 108개 사업에 3조원이 투입된다. 분단과 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 보고인 DMZ 인근에 도보여행길(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해 세계적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데에는 286억원이 투입된다. 또 한탄강 주변을 접경지역 대표 생태체험공간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한탄강 주상절리길'(연천·포천·철원, 119㎞) 사업에는 2020년까지 611억원을 쓸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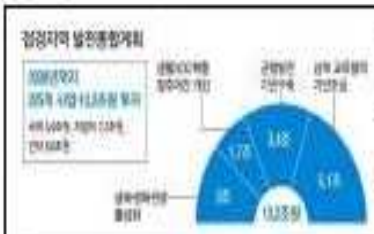
생활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전략에는 42개 사업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부터 2025년까지 강화부터 고성까지 권역별 10개 거점지역에 순차적으로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1개소씩 세워진다. 2021년부터 10년에 걸쳐 이들 지역에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에는 2035억원이 투입된다.

균형발전 기반 구축 전략에는 '은동산업단지(BDX) 조성 사업'(경기 연천, 1188억원) 등 총 54개 사업에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조성 사업(1000억원)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21개 사업에 5조1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경향신문

2019년 02월 08일 (금)
종합 02면

DMZ 도보여행길 조성… 접경지 13조 투자



접경지역 지자체별 주요사업

		사업명	현재시기(년)	사업비(억원)
강원 (8개 시·군)		평화를 여는 길	2020	596
		비무장지대 리조트	2026	1000
		DMZ 자동차 실 경로	2030	2655
인천	옹진	영흥~선도 블록드로	2024	1000
	강화	고려 동서횡단도로	2025	8
경기	가평	청년 내일을 제작소	2020	100
	파주	율곡 힐링선 비무장지대 다리	2024	276
	김포	보구 문화복 거리	2025	100
	양주	고랑체험마을	2024	300
	동두천	청주동두천 상생발전	2020	200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2020	200
	연천	전곡리선사	2020	1000
강원	춘천	접경지역 시민공원조성사업	2020	50
	철원	철원문화 교류센터	2020	500
	화천	심리 힐링지역 환경개선	2020	100
	양구	전시용 저수지	2024	900
	인제	폐자시설 활용한 생업시설공간	2020	100
	고성	시계탑 예술 체험 관광지원	2021	50

한반도가 경제다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 등 남북 교류 루트 9조원 '퍼다'

연천 신탄·고양 장단평 등 균형발전 사업도 54개 진행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DMZ 일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총 13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별 안전자원 필요한 사업을 대거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계획은 남북 교류·협력 기반 구축, 균형발전 기반 구축, 관광·생태 관련 활성화, 생활 시설 개선 등 4대 전략과 10대 과제 아래 모두 225개 사업을 세우는 것이다.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총 13조2000억원, 지방비 2조2000억원, 민간 5조6000억원을 들여 추진된다.

기존 남북 에너지·해양 협력 등 교류·협력 기반 구축하는 21개 사업이 추가된다.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는 2024년까지 완공 2차로 건설된다. 경원선 남북 구간 복원과 연계해 동두천에서 남북한 철원평야를 지나 남북교류 거점도시로 조성된다.

균형발전 기반 구축과 관광 활성화 관련한 조성, 구도심 쇠퇴 개선, 청년 창업·취업 등 2건 지원 업무가 포함된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경기 연천 전곡리선사박물관 조성, 강원 철원 노동당 당사 복원, 경기 김포 보구 문화복 거리 조성 등 54개 사업이 진행된다.

생태·평화 관련 활성화 사업은 DMZ 인근 도보여행길,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DMZ 인근에 조성되는 도보길은 "동물들이 는 길"은 연천도 서쪽과 동쪽 끝인 김화·강원 고성으로 이어지는 총 264㎞ 코스로 현재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생활 SOC 사업으로는 접경지 10개 관광명소 간 교통 체계 공동 제공 복지시설 등 다양한 8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주차시설 마련도 사업한다. 정부는 2011년 제정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이번에 고쳐 사업에 총 사업비 1조2000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이번 총 사업비 가운데 민간자본이 전체의 44%인 5조6천을 지자체 논란이 없이 일었다. 사업기간은 부족, 관광지 개발 이전 등 6개 사업은 이번 수정 발표 계획에서 빠졌다. 제외된 사업 중 철원 두루미 공사업은 인천 강화 연안 크루즈 관광기반시설 구축, 경기 포천 한탄강 자연문화센터 유치, 김포 해안도로 연결 등 30개 사업이다.

박상용 선임기자 sweetboy@kyunghyang.com

한겨레

2019년 02월 08일 (금)
종합 01면

DMZ 등 접경지역 관광·인프라에 13조 투입

정부, 2030년까지 225개 사업 편성

안보 관련 규제로 발전이 더딘 접경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13조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걷기여행길을 조성해 생태평화 관광을 육성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강원·경기·인천의 15개 시·군에 2030년까지 13조2천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만들어 지난 8년 동안 2조8천억원을 투입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변경안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이미 투자한 금액의 5배를 추가로 투입하게 된다. 5조4천억원은 국비에서 지원되며, 2조2천억원은 지방비, 5조6천억원은 민간자본에서 조달한다. 새로 바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4개 전략, 10대 과제 아래 모두 225개 사업이 편성돼 있다.

▶8면으로 이어짐

김미향 기자

중앙일보

2019년 02월 08일 (금)
사회 12면

펀치볼에 곤돌라, 456㎞ 도보길 … 13조원 문재인표 DMZ

(강원도 양구)

정부, 2030년까지 접경지역 개발
이명박 정부 시절 기본구상 변경
환경단체 "생태계 파괴 불가피"

6·25 전쟁 때 격전지였던 강원도 양구군 펀치볼 지역에 200억원을 들여 곤돌라와 전망대를 조성한다. 연천시 경순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비무장지대(DMZ)를 가로지르는 456㎞ 길이의 도보길이 생긴다.

생태관련전문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접경지역 통합개발계획'을 개발한다.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를 타면서 토지 이용, 대규모 개발 등에서 제약을 받았던 접경지역인 경기·인천·강원도 접경지역의 15개 시·군에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관광 활성화(3조원) ▶인프라 확충(1조7000억원) ▶경제성장 기반 조성(3조4000억원) ▶남북 교류협력 토대 마련(5조1000억원) 등 4개 분야 225개 사업이다. 2030년까지 13조2000억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다. 이른바 '문재인표 DMZ 구상'인 셈이다.

강원도 양구군 펀치볼 전망대. 왼쪽는 200억원을 들여 곤돌라와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강원도 양구)

이번 계획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8월 나왔던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당시엔 "2030년까지 총 3조8000억원을 들여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효과가 지지부진했다. 지난해까지 투자된 금액은 2조8000억원에 그쳤다. 박형배 생태계보전과 지역균형발전과장은 "당시 세웠던 접경지역을 화해 만개 벨트로 하는 것"이라며 "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에서 신성한 수익 사업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제부터 환경, 개발, 환경 이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양구군 펀치볼에 생태계보전과 곤돌라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에 양구군 해안면에 있는 펀치볼 지역에 200억원을 들여 곤돌라와 전망대, 생태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해안면 펀치볼은 접경지역 중 북쪽 맨 끝자락으로, 마치 화채그릇(Punch Bowl) 같이 생겼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펀치볼 곤돌라는 양구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자본 지출 15분 거리인 해안군과 동지면 사이를 잇는 1.8㎞ 길이의 곤돌라를 놓아 관광 관광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기존 전망대를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당시엔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돼 백지화됐으나 이번 계획에 들어간 것이다. 최근엔 인근 화천군에서 배정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중이라 사업 중복성도 지적된다. 박형배 과장은 "양구는 (화천과) 같은 지역이 아니다"며 "다른 쪽으로 환경영향평가, 국방부와 협조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은 국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양구는 댐조차가 1급인 산양 서식지인데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성급한 개발 계획이 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인호 양구군수는 "도로를 따라 지주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산림 훼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포천군·연천군 등 맞닿은 연천의 주상절리 협곡에 생태평화공간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관광객을 위해 10㎞ 총 6시간 길이 등산로가 DMZ 생태계 전문가인 한신희씨는 "최근 연천군 내 감시초소(GP) 철수 과정에서 두루미 서식지가 위협받은 사례가 있다"며 "이번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프레임'에 관해 생태 보존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일회성일 수밖에 없는 한 번의 생태관광은 접경지역으로 생태계를 파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총 13조원대인 종합계획 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가 7조원을 넘는다. 철원·신도 2개 경제도로(1000억원), 액화천연가스(LNG) 시장(2000억원) 등이다. 경원선 동일본여교류센터를 지는 데 500억원이 들어 있다. 지난달 말 24조원대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또 다시 5조원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이다.

시민단체 녹색연합 권문희팀장은 "이미 예비 면제된 'DMZ 비전 공모'와 '생태계 보고(寶庫)를 위해'와 비슷한 난개발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김순호 자연DMZ생태연구소장은 "정부 부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일부만 반영돼 유감스럽다. DMZ라는 마지막 특별한 공간에 대해 시간을 두고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lee.sangyeok@joongang.co.kr